

사회

학교회계 처리·학부모회 모집·교원평가...

교사 직무 폭발적 증가

공문 학교당 하루 50건 ... 보조교사 도움안돼

광주지역 교사들의 업무(수업 외 업무)가 급증하면서 수업준비 차질 등 학교교육의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다.

12일 광주시교육청과 전교조 광주지부 등에 따르면 3월 개학과 동시에 교육 선진화 등을 명분으로 각종 교육 정책이 시행되면서 초·중·고교 교사들이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올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와 시 교육청에서 시행한 교육정책은 '에듀파인'(edufine) 학교회계시스템 도입, 학부모회 모집, 교원평가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교사들은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는 물론 수업준비 자체도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마무리해야 한다. 이같은 업무 증가에 따라 1개 학교당 하루에 처리해야 할 공문만 평균 50건이 넘는다는 게 전교조 광주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올해 교육과학기술부와 광주시교육청은 30여억원을 들여 학습보조교사 236명을 배치했지만, 보조교사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업무를 줄이는 데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한 중학교 교사는 "기존 행정실에서 했던 회계 업무까지 교사가 직접 하고 있다"면서 "각종 잡무에 시달리다 보면 퇴근시간이 밤 9시를 훌쩍 넘기도 해 정작 중요한 수업준비를 못할 때도 있다"고 푸념했다. 교과부에서 올해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학부모회 구성 업무도 교사의 몫이다. 교사들은 맞벌이 가정 등의 증가로 학부모회 구성이 쉽지 않아 학부모들에게 가압을 읍소하고 있는 실정이라

▲에듀파인(edufine)=광주시 교육청이 올해 예산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학교에서 예산편성에서부터 품의·지출·결산까지를 윈-스톱으로 처리하는 행·재정 통합 시스템.

고 토로했다.

교사와 학부모, 학생에게 평가를 받는 '교원평가제'의 시행도 교사의 업무량 과중의 큰 요인이다. 올 3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로 교사들은 연 4회씩 공개수업을 하는 등 각종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 외에도 학교 교육 과정에 맞춘 체험학습, 체육대회 등 다양한 행사, 담임 업무 등 처리해야 할 일들이 수두룩하다.

전교조 광주지부 김정섭 정책실장은 "잡무가 많아 현장교사들의 불만 차원을 넘어 이직마저 고려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강제입원 당하고 보니 내가 정신병자”

정신병원 '인권 사각' ... 광주인권위 1년간 진정 122건

전문 의 면담없이 입원시키고 면회·전화·서신 금지도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박모(43)씨는 지난해 5월 19일 끔찍한 경험을 했다. 가족들의 신고로 병원 직원 3명에 의해 전남지역 모 정신병원에 강제도입된 것이다.

특히 박씨는 입원 과정에서 정신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지 못했다. 현행 정신보건법에는 정신병원 입원을 위해서는 전문의의 사전 면담을 받도록 규정돼 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박씨는 또 입원한 지 이틀이 지나서야 입원 동의서를 작성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겪었다.

박씨는 한 달 뒤인 6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소장이정강)에 진정을 제기하고서야 억울함을 달랠 수 있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단순 알코올의존증이 있는 박씨가 강제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증 정신장애인'으로 몰린 사실이 확인됐다.

가족이 없는 김모(40)씨는 '무연고자'라는 이유로 모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목사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했다가 인권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이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목사를 내세워 김씨를 강제로 입원시킨 사실을 적발하고 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광주와 전남·북지역 정신병원 등 다수인보호시설의 인권침해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접

수된 광주와 전남·북의 다수인보호시설 관련 진정 건수는 122건으로, 이들 시설의 인권 침해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이 가운데 23건을 인권침해 사건으로 분류하고 권고나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문제가 해결된 사건은 22건으로, 1년간 총 45건의 다수인보호시설과 관련한 사건을 해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들 시설에 수용되는 환자 가운데 상당수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치료기관에 입원한 뒤 장기간 치료를 받는 등 '인권 사각'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또 피해 환자들의 경우 거친 술버릇과 알코올중독, 우울증 등을 발미로 가족들에 의해 강제로 입원한 뒤 면회금지나 전화·편지제한 등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게 인권위 측의 설명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곡성 저수지서 대학생 익사

12일 오후 6시10분께 곡성군 옥과면 죽림저수지에서 전남 모 대학 1학년 양모(20)씨가 물에 빠져있는 것을 119구조대가 구조했으나 숨졌다.

경찰은 양씨가 학과 동기 등 110명과 함께 5월께 실시하는 부사관 채용 관련 체력검정에 대비하기 위해 훈련을 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계경기자 kjkim@

가짜 환자 병원 들어 절도행각

○광주북부경찰은 12일 교통사고 환자 행세를 하며 병실 환자들의 금품을 털어 온 변모(32)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

○경찰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달 8일 오전 9시에 광주시 북구 풍향동 모 병원 206호 병실에서 환자 채모(31)씨의 사물함을 뒤져 7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12차례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가 피해자들의 신고로 달미.

○변씨는 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광주시 북구와 서구 일대의 병원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허위로 입원한 뒤 절도 행각을 벌였다는 것. ○경찰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주로 CC-TV가 없는 병원만을 골라 범행했다"는 변씨의 진술을 토대로 여죄를 추궁중.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여수경찰, 선거법위반 2명 긴급체포

여수경찰은 12일 유권자에게 금품을 살포한 모 여수시장 예비후보 측 선거운동원 김모(49)씨와 이모(50)씨 등 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초 여수시 남면 등에서 택시기사 김모(47)씨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3차례에 걸쳐 230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기사 김씨는 평소 김씨와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오는 18일 실시되는 여수시장 경선 여론조사에 대비해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김씨에게 당원명부를 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 등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거쳐 영장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후배 여자친구 성폭행

북부경찰, 40대 영장

광주북부경찰은 12일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임모(42·광주시 동구 소재동)씨에 대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30분께 동구 소재동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A(17·고교 2년)양을 작은방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뒤 인근 모텔에서 또다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임씨는 3년 전 같은 병원에 입원한 인연으로 알게된 후배 남모(20)씨가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자 세 명이 함께 술을 마신 뒤 남씨 등이 잠든 틈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범행 후 A양과 함께 모텔에서 나온 뒤 인근 모텔에서 잠을 자던 중 A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구제역 확산 막아라”

12일 광주 북구청 경제정책과 농축산팀 직원들이 인천 강화군에서 발생한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북구 월출동 박래성(65)씨의 축사에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귀가여성 돈 뺏은 3인조강도 검거

광주광안경찰

광주광안경찰은 12일 귀가하는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김모(21·광주시 북구 중흥동)씨 등 3명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9일 새벽 2시40분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 한 건물 앞을 지나던 이모(여·25)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 6일 밤 10시께 북구 무등경기장 앞에서 자신들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린 글을 보고 오토바이를 구입하려 온 정모(17)군 등 2명으로부터 현금 28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전노제 110-5호

목사면직공고

- 성명 : 채규현(55세) ■ 소속 교회 : 대한 예수교 장로회 전남 제일 노회
■ 성직 및 신급 : 목사 ■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452-22 일신A105/905호

주 문

전남 제일 노회 광주중앙교회 목사 채규현씨를 목사직 면직에 처한다.

이 유

1. 이단사상주장(기독교리(성육신)부정, 이신칭의 교리부정)

기독교는 교리를 갖는다. 교리는 기독교의 근본진리이다. 이 교리를 교회가 받아들이면 기독교가 되고 거부하면 기독교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교리는 기독교의 생명이다. 그런데 피고는 기독교리(예수님께서 12살이 되어서야 성령께서 그 심령에 역사하시어 비로써 신의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와 이신칭의 교리(회개의 열매를 구원의 조건으로 주장함)을 부정하였다.

북취록에 대한 신학적 증거(2010년 1월3일, 1월24일)

- ① 광신대학교 신학 위원회의 “채규현 목사 설교문제점 분석 제출의 건”에서도 기독교리와 이신칭의 교리를 부정하고 있다고 해석하였음(본 노회 재판국에서 광신대학교에 의뢰하여 제출받음)
② 서철원 박사(전 총신대 신학대학원장, 부총장역임)의 “채규현 목사의 설교, 요한의 세례와 그리스도 탄생의 의미에 나타난 신학적 문제점들”에서 기독교리와 이신칭의 교리는 기독교의 근본교리인데 이를 부정하는 것은 이단이라고 해석하였음.(최종설명서에 첨부됨)(권징조례 제 42조)

2. 본 재판국이 통고한 통고서 위반(전재3호 주후 2010년 3월19일)

피고는 고소내용과 관련하여 판결이 확정될때까지는 당회를 소집하거나, 아무도 권징하거나, 교회를 분리하거나, 교단진로를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해서는 안되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불법인것과 동시에 이에 따른 법적책임을 져야 할 것을 통고하였으나 괘하고 같이 권징조례 46조를 위반함 (주후 2010년 4월 5-6일 불법당회를 소집하여 장로 9인 안수집사 1명, 권사 1일은 권고 사직시킴. 4월4일 주일 1,2부, 밤 예배 시에 목사 지지 서명을 받음으로 교회분당을 조장함.)

3. 재판국 소환불응

피고는 1차 소환에 타당하지 않은 이유(재판 불응 소원사유서)로 출석하지 않았고, 2차 소환에도 타당하지 않은 이유(재판 불응 소원사유서)로 출석하지 않았고 3차의 출석 요구에도 아무런 이유없이 불응하였음은 권징조례 제 6장 제 39조를 위반 하였음.

·법적용조문 : 헌법 권징조례 제 6장 제 42조, 제 46조, 제 39조에 의거함

주후 2010년 4월 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남제일노회

노 회 장 : 김 광 현 / 재판국장 : 김 형 진 / 서 기 : 박 종 일